

“한투공 사장 망언 규탄”

〈한국투자공사〉

최근 공사 창립 18주년 맞아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 우려” 사실상 거부 서난이 도의원 “자산운용 공공기관 집적화 추진 전북의 바람에 찬물 끼얹는 격”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도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공격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문책과 해임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이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7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13일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은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투공을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전북이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서난이 의원은 “전북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공공기관 집적화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도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조봉에 가까운 망언으로 도민들을 기만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목표에 반할뿐더러 대선공약마저 부정할 발언으로 지역을 모욕한 진사장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유·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해 추진 중에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흔들기를 넘어 죽이기에 가까운 시도와 망언들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의 국정 목표와 철학은 그 진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절반을 기만하는 국정운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던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발표를 내린 총선 이후로 늦추며 눈치를 보고 있는 행태도 부산과 전북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 간 노골적인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기재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전북을 방위산업 메카로 만들어야”

김희수 도의원 “탄소산업과 연계 가능”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제40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 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의 방산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도 급변하고 있는 동향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이며,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2.8%로 세계 8위이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방산기반이 부족하지만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가 있으며, 방위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 시켜 확대한다면

새로운 방산 영역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새만금개발청과 첨단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부지에 K방산 연구·실증단지 및 기업·학교·기관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무인드론, 로봇 등 첨단 방위산업 연구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내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는 4개 기업 방산관련 기업은 5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45개로 전국 국방벤처센터 10개 지역 가운데 가장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기업을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하여 인력 양성과 시험·연구장비구축 지원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전라북도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정책들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작물 침수피해 선제대응 절실”

김동구 도의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력 집중을”



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에 전북도가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내린 폭우로 도내 1만 6,673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고 작물별로는 벼 1만 952ha, 논콩 4,994ha, 시설원예 577ha로 피해가 컸으며 익산시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축산면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도내에는 이번에 선포된

지역 외에도 군산시의 경우 3,514ha, 부안군은 2,088ha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추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이들 지역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군산과 부안군을 비롯해 김제시 전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호우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로 인해 올해 논콩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면서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논콩이 침수로 초도화됐다”며 “논콩 피해 농가에 대한 별도 현장조사 없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가장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축산면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도내에는 이번에 선포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 실습을 실시했다.

전북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모의 투표 실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의(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사전)투표 설비·준비·진행·마감 등 투표 전과정을 재연함으로써 (사전)투표 진행절차의 완벽한 이해와 숙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놓고 간 경우’ 등 실제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재연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투표관리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실습이후 직원들 상호간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각 업무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투표관련 쟁점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투표용지를 놓고 간 경우 등 실제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재연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투표관리 능력을 점검했다. /김재훈 기자

“정부 권장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 지원을”

김정기 도의원 “전북 논콩 재배 면적 전국 1위

침수피해 입은 곳은 도내 전체의 40%에 육박

논콩 안정 재배 필수 배수시설 미흡 피해 더 커워”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략작물 가운데 논콩 재배에 나선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전북지역의 논콩 재배 면적은 총 1만 1,500헥타르로, 재배 면적에서 전국 1위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전북의 논콩 재배 농가들은 6월과 7월의 집중 호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6월에 파종을 하는 논콩은 발아를 못하게 해서 수확이 어려운 작물로 여름철 장마와 집중 호우에 취약하며, 올해 일찍 시작한 장마에 이번 호우까지 겹쳐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논콩의 안정



적 재배에 필수적인 배수시설도 미흡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의 논콩 재배면적은 7월 19일 기준 4,500헥타르를 넘었는데, 이는 전북지역 전체 논콩 재배면적의 40퍼센트에 육박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 피해 규모를 기록한 경북(200헥타르)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실상가상으로 논콩 재배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있으며, 논콩을 대신해 타작물을 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위기 돌파를 모색해 볼 여지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김재훈 기자

이와 관련해 김정기 의원은 “전북지역의 피해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논콩을 재배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금마저 막혀 이중고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시름과 고통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은 정부에 촉구한 피해 지원책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 재해보험 즉시 가입, △논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조건인 출현율을 90%에서 70%로 하향,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률 대폭 할인, △논콩 대파의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전략작물 아닌 대체 작물 파종 시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논콩 재배 농가의 용수와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 확대, △농어촌공사가 논콩 재배를 위해 임대주택 농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재난지원금의 보상기준 현실화와 논콩 재배농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모두 7가지다. /김재훈 기자

“전라도 천년사 즉각 폐기해야”

임승식 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주장했다.

정읍 고부(古阜)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위상이 전라도 천년사에 왜곡되고 폄하돼 있다는 것이 폐기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또한 “전주를 ‘비리’로 ‘남벌’을 ‘기분’으로, ‘김제’를 ‘벽중’으로, 동학혁명의 발생지 ‘정읍’을 ‘포미지’로 표기한 것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잘못 인용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를 보고 집필자의 학문적 양심이 의

심된다”며 “이를 묵인하고 출간을 인정한 전북도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읍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오류 수정을 요구하며, 전라도 행정부지사와 담당 국과장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하고 토론도 실시해 착오없이 편찬하겠다”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승식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해 말 이미 10권짜리 1,100쪽이 이미 출간됐으며 심지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승식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라도 천년사 인쇄 과정과 보관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전라도 천년사를 당장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정부, 양과 TRQ 수입 9만톤 증량 철회해야”

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양과 저울관세할당량(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저울관세할당량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주요내용은 양과 수입 물량을 현행 2만6,450톤에서 1만1,645톤으로 9만 톤을 증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양과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근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특히 양과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 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양과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양과 수입 결정은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사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양과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국내의 양과 자급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과 1kg 당 평균가격은 올해 7월 기준 2,381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0.6%(15원)가 감소했으며, 전북의 양과 생산량은 전국생산량 대비 약 8.5%로 작년에 비해 1.6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7월 중

2차 정례 의원간담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7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안건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운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양운업 의원은 “시장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김제시의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추진과 성과평가, 의회보고와 우수공모사업 표창 등 공모사업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그치지 말고 연도별 실적을 분석하고 성공률을 높여 실질적으로 김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완성도를 기해 중간에 흐지부지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개’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장 운영의 책임성 향상을 비롯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자 의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조례안이라도 하더라도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있어야 조례가 제 기능을 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장정반을 아우르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김제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